정부 "'울산화력' 4·6호기도 해체…구조 속도 높아질 것"

울산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사고… 실종자 2명 매몰 위치 못 찾아
인근 구조물도 추가 붕괴 위험… 4·6호기 발파 후 구조 이어가기로
노동장관 "실종자 가족과 함께 의논… 신속한 구조 최선 다할 것"

지난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보일러타워 붕괴사고로 사흘째 수색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실종자 구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고 인근의 보일러타워도 해체하기로 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7일) 오후 11시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해 회의를 벌인 끝에 사고가 난 5호기 인근의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4·6호기는 사고가 난 보일러타워 5호기 양 옆에 서 있는 구조물로, 이미 취약화 작업이 진행돼 추가 붕괴 우려가 제기돼왔다. 중수본은 전문가들과 함께 4·6호기의 보강 또는 해체 여부를 수차례 검토한 끝에 이를 해체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파 후 피해자 구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수본 공동 본부장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의 모든 구조 과정은 가족들과 함께 이뤄질 것이며 전 부처와 지방정부가 소방당국과 함께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6일 오후 2시6분께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타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발주공사를 맡은 HJ중공업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발파전문업체)에서 고용한 작업자들이 보일러타워 폭파 전 구조물이 잘 무너질 수 있도록 하는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대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 발생 이틀째인 7일 오전 소방관 등 관계자들이 매몰자들을 구조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사망 3명,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이다.

매몰된 9명 중 2명이 사고 직후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새벽 철근 등에 끼인 근로자 1명이 발견됐지만 구조 도중 심정지로 숨졌고, 이어 추가로 구조된 2명도 모두 사망했다.

소방당국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4명 가운데 2명을 발견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모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2명은 매몰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은 실종 상태다. /뉴시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는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BIXPO 2025' 어워즈에서 '융합·활용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켄텍 제공

켄텍, 한전 BIXPO 2025서 '에너지 융합·활용 부문' 대상

AI·에너지 융합 기반 'K-Grid 전력망' 혁신 성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가 7일 한국전력공사 주최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회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 시상식에서 '융합·활용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켄텍은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적인 교육 모델과 인공지능(AI)·에너지 융합 연구 성과를 선보이며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K-Grid'(한국형 스마트 전력망) 전시존서 AI 기반 분산전력망 운영, 생산-수요 통합형 재생에너지 활용, MVDC(고압직류송전) 기술 등 대표 연구성과를 시각화한 디지털 콘텐츠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AI와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결합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모델은 산학연 공동연구 우수 사례 외에도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혁신적 모델로 인정받았다.

박진호 켄텍 총장직무대행은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과 산업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은 K-Grid 연구와 융합 교육 모델이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켄텍은 BIXPO 2025 어워즈에서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와 산업계 관계자들에게 차세대 전력망 기술의 가능성을 선보이며,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 연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뉴시스

올해 가구 62.3%만 직접 김장한다… 4인 기준 18.3포기

농경연, '김장 않고 상품김치 구매' 응답, 32.5%로 증가세

올겨울 직접 김치를 담그겠다는 가구 비율이 62.3%로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번거로움으로 인해 상품김치를 사겠다는 가구는 3명 중 1명으로 늘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김장용 배추는 18.3포기로, 배추와 무 등 주요 김장 재료 생산량이 늘면서 김장비용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7일 발간한 농정포커스 '2025년 소비자 김장 의향 및 주요 채소류 공급 전망'에 따르면, 김치를 직접 담근다는 비율은 62.3%로 전년(64.5%)보다 감소했다.

반면 상품김치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은 32.5%로 전년(29.5%)보다 늘었다. 상품김치 구매 비율은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소비자의 김장 의향은 '전년과 비슷하게 하겠다'는 응답이 68.7%로 가장 많았고, '전년보다 적게 하겠다'는 응답이 16.3%, '전년보다 많이 하겠다'는 응답이 15.0%로 조사됐다.

김장을 줄이겠다는 이유로는 '가정 내 김치 소비 감소'(49.0%), '상품김치 구매가 편리해서'(18.4%), '집에 남은 김치가 많아서'(16.3%) 순이었다.

김장 시기는 본격적인 김장철인 11월 중순~12월 상순에 집중됐다.

4인 가족 기준 김장용 배추 구매 의향은 18.3포기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8.5포기)보다는 1.1%, 평년(21.2포기)보다는 13.6% 감소한 수치다. 무는 8.4개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평년(8.5%)보다 1.1% 감소했다. 농경연는 "가정 내 김치 소비량 감소와 상품김치 구매량 증가 등으로 김장배추 구매량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장배추 구매 형태는 절임배추가 58.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선배추는 38.7%, 신선·절임 혼합은 2.4%였다. 절임배추 구매는 2022년 55.9% 이후 증가세이며, 신선배추는 전년(42.6%) 대비 3.9% 포인트(p) 줄어 올해를 기점으로 구매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뉴시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전남 9개소… 국비 629억원 확보

생활·안전 인프라와 생활서비스 확충·정주여건 개선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전국 34개소 중 9개소가 선정돼 898억 원(국비 62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선정 규모의 약 26%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남도의 해양정책 추진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다.

선정 사업지는 여수 두포항, 순천 대대항, 고흥 남열항, 강진 수인항, 해남 학가항, 무안 도원항, 영광 월곡항, 완도 금일 관문권역, 신안 상태도항 등 총 9개소다.

각 지역에는 최대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어촌의 열악한 생활·안전 인프라와 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남에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5개소가 해당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천241억 원을 유치했다. 이번 9개소를 포함,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가 매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사업계획 수립 초기부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 수요에 맞춘 전략을 펼친 때문이란 분석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선정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낙후된 어촌의 생활·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열악한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전남 어촌지역 활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광주상의,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지방비 부담 조정 건의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7일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공사의 지방비 부담이 과도해 지역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주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광주상의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은 1986년 4차로로 확장된 이후 현재 하루 약 14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이는 적정 통행량인 5만1300대의 2.7배에 달한다"면서 "이로 인해 상습 정체와 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광주 도심권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주요 물류 축이자 대표적 병목 구간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물류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가 중앙정부 20%, 한국도로공사 30%, 광주광역시 50%로 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재병분담 비율 조정을 요구했다.

광주상의는 구체적으로 총사업비 약 7934억원 중 정부정책 강화로 인해 추가된 3400억원은 중앙정부와 도로공사가 분담하고 나머지 4530억원에 대해서만 광주시가 50%(2267억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광주상의는 이날 대통령실(정책)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신영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